

# KNSI REPORT

컨퍼런스

<제22회 코리아포럼(3회전문가좌담회) 녹취록>

## 지역주의 경로를 통한 사회통합형 세계화와 한국의 FTA 정책방향

일시 : 2009년 5월 11일(월) 14:00-16:30 / 장소 : 코리아연구원

- ▶ 사회: 이일영(한신대 교수)
- ▶ 발표: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 토론: 정태인(칼라TV 대표)  
윤성욱(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동아대 교수)  
주장환(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신대 교수)

● 주최: 코리아연구원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나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후원 및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이일영):** 오늘 코리아연구원의 전문가좌담회는 한국의 FTA전략 전반에 대해 논의하여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태욱 교수님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발제(최태욱):** 준비해온 발제문은 계간 <<비평>> 여름호에 게재될 「지역주의 경로를 통한 사회통합형 세계화」라는 글을 토대로 준비한 것입니다. 우선 이 발제문의 내용을 가능한 한 간략히 말씀드리고 토론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화 자체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는 것은 오해다. 세계화를 지구촌 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산이라고 정의할 때 그 세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거래 비용의 감소 등에 따른 무역과 투자 영역에서의 경제통합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상승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야말로 대세이다. 다만 세계화의 진행 방식이나 형태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모색하고 있다. 세계화는 대세임이 분명하나 신자유주의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러한 대안 중의 하나인 소위 ‘지역주의 경로를 통한 사회통합형 세계화’라는 (현재로서는 거의 상상단계에 있는) 거친 구상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화의 최근 흐름을 보면 WTO 등 다자기구의 영향력 약화로 인해 지역주의나 양자주의 경로가 크게 부상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GATT와 WTO 등 다자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세계화를 추진해오던 미국의 전략도 1990년대 이후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이는 여타 국가들이나 지역단위체의 지속적인 경제력 및 정치력 부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유력 행위자의 수 혹은 규모의 증대로 인해 다자주의 방식이 더 이상 효율적인 세계화 추진 전략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이 새롭게 택한 전략은 지역주의 및 양자주의 방식을 혼용하는 것이었다. 거기서의 핵심 정책 수단은 FTA이었다. 예컨대 미국은 북미주지역에서의 NAFTA 형성에 이어 전 미주를 대상으로 하는 FTAA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개별국가와의 양자간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U의 지역주의는 잘 알려진 그 대로이다. EU는 지역통합체로서 스스로의 위상이 성숙됨에 따라 자신의 외연을 넓혀감으로써 세계화의 또 다른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NAFTA나 EU 외에도 비록 제도화 정도는 그들에 아직 못 미치지만 동남아, 중동, 남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나름의 지역주의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ASEAN, Mercosur, EFTA 등과 같이 비교적 잘 알려진 지역협력체 외에도 남미국가연합(SACN), 걸프협력회의(GCC),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이 도처에 버티고 있다. 지역주의 혹은 지역경제통합은 이미 세계적 대세인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지역주의는 폐쇄적·고립적이라기보다는 개방적·연계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EU가 타 지역과의 관계 맺기, 즉 역제주의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예컨대, 남미 국가들과는 이미 1995년에 체결한 EMIFCA(EU-Mercosur Inter-regional Framework for Cooperation

Agreement)라는 지역 간 협정으로,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2000년의 코토누협정(Cotonou Partnership Agreement)을 통해 지금까지 역제협력관계를 상당 수준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동아시아의 ASEAN+3 국가들과의 정례 모임인 ASEM 역시 1996년 이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북미와의 지역간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TAFTA(Trans-Atlantic FTA) 구상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역제주의 외교에 있어서도 FTA가 핵심 정책 수단이다. EU가 주도하는 지역간 FTA에는 EU-ASEAN, EU-GCC, EU-Mercosur FTA 등이 있다. GCC나 SACU 등 제도화가 상당 수준에 이른 여타 지역협력체들 역시 FTA를 통한 지역간협력체 구축에 열심이다. 그들은 각각 Mercosur 및 EFTA와 지역간 FTA를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의 심화 및 확산 운동과 병행하여 이미 오래전에 ‘역제협력체제’(inter-regional cooperation system)의 구축 작업이 개시되었다. 지역주의와 그것의 발전을 기초로 하는 역제주의적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다자주의의 무기력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이와 같은 지역주의 경로가 세계화의 흐름을 주도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세계화의 경로로 지역주의가 선호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계화는, 특히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방식에 의해 진행될 때, 빈부격차 혹은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여러 차원에서 낳을 수 있다. 세계화는 사람과 자본, 상품과 서비스 등의 나라 간 이동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주체들 간의 초국적 경쟁 상태를 격화시킨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있는 소수 경제주체들은 보다 많은 부와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다수는 더 열악한 상태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로 사회를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 확대 문제는 일국 내의 경제주체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에도 동일한 사유에 의해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양극화가 장기화될 경우 다수인 패자들은 (국내 사회집단뿐만이 아니라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국가와 지역들까지 포함하여) 당연히 이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세계화 그 자체와 그것의 주도세력들에게 저항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이러한 반세계화 운동은 현재 국내 및 국제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일고 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재)분배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세계화는 사회를 통합이 아닌 분열로 몰고 갈 수 있으며, 따라서 반세계화 운동에 의해 그 진행속도가 늦춰지거나 혹은 심할 경우 좌절될 가능성이 있다.

작은 규모의 국지적 반세계화 운동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지만, 전 지구적 차원의 것은 1999년의 ‘시애틀 투쟁’을 시발점으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100여국에서 모인 5만여 명의 시애틀 투쟁단으로 인해 그해 WTO의 개막식은 무산되었고 새로운 무역라운드의 출범은 좌절되었다. 2001년에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시민단체 대표들을 주축으로 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WSF)이 만들어졌다. 이 기구는 “대안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라는 구호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모색하는 전 지구적 모임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반세계화운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사회포럼, 아시아사회포럼, 아프리카사회포럼 등과 같은 대륙별 사회포럼들이 속속 결성되어 해당 지역 내에서의 세계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 움직임에 반대하는 남미 지역 시민단체들의 초국적 연대운동이 세계인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 운동은 중국에 국가차원의 반신자유주의 연대로 이어져 남미국가연합의 성격을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소위 ‘세계화의 주류 방식’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반세계화 운동과 관련되어 펼쳐지고 있다. 세계화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국가 혹은 지역단위체들은 자기 국내 혹은 역내에서 부단히 증대하고 있는 경제통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자주의, 지역주의, 다자주의 등 어느 경로를 통하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 국가 혹은 지역 간에 ‘더 나은’ 경제통합 달성을 위한 일종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 경쟁의 승리는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반세계화 세력의 힘과 세가 (경쟁 상대에 비해) 약한 국가 혹은 지역단위체에게 돌아간다. 사회적 반대가 적을수록 경제통합의 추진은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학습효과 등에 힘입어 반세계화 운동을 적게 촉발시키는 세계화 방식, 즉 사회통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세계화 방식이 더 경쟁력 있는 세계화 추진 전략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이 경우 점점 더 많은 국가들과 지역단위체가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통합형 경제통합이 하나의 보편적 세계화 추진 방식으로 자리 잡게 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통합형 경제통합을 당장 글로벌 차원에서 다자주의적으로 추진해가기는 어렵다. 경제통합을 진행시켜가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상 혹은 복지체계가 확립돼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다자주의 환경에서 달성해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다자주의 경로에는 워낙 많은 수의 국가행위자들이 참여하므로 거기서는 전형적인 ‘집단행동의 문제’ (collective action problem)가 만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통합형 세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다자주의보다는 지역주의가 우월한 경로가 된다. EU나 ASEAN의 예가 보여주듯, 지역경제통합 작업은 소수 회원국들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개시된다. 소수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 상황이므로 집단행동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내 및 역내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나 격차의 심화 등과 경제통합의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혹은 제도적 해결책은 비교적 수월하게 마련될 수 있다. EU의 ‘유럽구조기금’ (European Structural Funds)은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지역주의 경로가 우월하다는 이유는 거기에서 채택이 수월한 사회통합형 경제통합이 사회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는 ‘저비용’ 방식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고효율’ 방식이기도 하다. 사실 경제통합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약소국들의 불안감 때문이다. 그들은 경제통합이 자신들 내부의 사회통합을 해칠 가능성은 물론 그로 인해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가 더욱 하락하거나 종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그런데 사회통합형 경제통합의 토대가 되는 복지 및 보상체계의 제공은 이 우려를 상당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복지나 보상은 단순히 손실의 보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취약 산업 혹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링, 업종전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노동자나 농민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재교육, 직업재훈련, 업무재배치훈련 등을 위한 지원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복지나 보상의 제공은 약소국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아일랜드의 성공 비결 중의 하나가 유럽구조기금의 적절한 활용이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사회통합형 방식이 발산하는 경제통합으로의 유인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 사회통합의 핵심 기제는 (재)분배 강화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인바, 그것은 내수 확대 효과로 이어진다. 고소득 계층과 달리 저소득 계층의 가치분소득과 소비는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복지 증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통합형 경제통합은 잠재되었던 역내 소비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내수시장의 확대, 즉 안정적인 통상 공간의 확보라는 유인을 역내 통상 국가들 모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통합형 경제통합이란 ‘국제 복지공동체’의 건설과 상통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통합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통합국가들 내부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담당할 복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제통합에 상응하는 만큼의 사회통합 정도가 유지돼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 국제 복지공동체 구축은 글로벌 차원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복지체계의 확립은 일단 국제협력이 용이한 지역 차원에서부터 시작돼야한다. 지역 복지공동체의 창출이 선행돼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주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지역 너머에서 수행할 최종단계의 글로벌 복지공동체 건설 작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역제주의가 담당할 일이다.

앞서 말했듯, 역제주의적 경제통합은 지역 간 FTA 체결 등을 통하여 현실에서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지의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확산될수록 (국제가 아닌) 이 역제 정치경제의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마야흐로 국가보다는 지역이 글로벌 정치경제의 주 단위체로 부상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목전에 있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서의 경제통합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가 아닌 지역단위체들이 해결하거나 수행해야 할 문제 또는 과제가 될 것이다.

특정 지역의 경제통합이 완성된다할지라도 무역이나 투자 이익의 무한 확대를 도모하는 역내 경제주체들의 경제통합 수요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더 큰 통합을 원할 뿐이다. 결국 해당 지역단위체는 다른 지역단위체와의 역제 경제통합을 모색하게 된다. 이때도 역시 경쟁력 있는 경제통합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 사회통합형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체들은 서로 ‘역제 복지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형국이 된다. 이 노력들은 중국에 하나의 글로벌 복지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의 무수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주의 경로의 국제협력이 아니라 기껏해야 소수에 불과할 지역단위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주의 경로의 역제 협력에 의한 것이므로 글로벌 역제 복지공동체의 구축은 비교적 용이한 일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지역주의 경로를 통한 사회통합형 세계화의 최종 모습이다.

이제 동아시아에 눈을 돌려보자. 지금까지 말한 사회통합형 세계화는 앞으로 참으로 멀고도 험한 여정을 거쳐야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지나간 경로에서 수많은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그중에서도 아마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일 것이다. 동아시아는 유럽 및 북미와 함께 세계경제의 3대축을 구성하는 주요 지역이다. 그러한 동아시아의 참여 없이 유의미한 역제경제통합체의 형성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상황은 다른 두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다. 복지공동체는커녕 기술적인 경제통합의 제도화 수준도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다.

그런데 어쩌면 최근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의 정체상황 해소에 새로운 자극이 될 지도 모른다. 실제로 금융통화 영역에서의 역내 협력은 상당 정도 강화되고 있다. 1200억달러 규모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에 합의했고, 그것을 발판삼아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창설하자는 논의도 재개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공동통화단위(ACU)와 같은 공동통화바스켓을 형성한 후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단일통화를 창출해내자는 주장도 개진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금융통화협력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통상협력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중 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對)역외시장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수행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집중은 지나칠 정도였다. 금번 위기로 미국의 소비경제가 침체하자 동아시아 국가들은 심각한 정도의 수출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소비수요 감소가 단기간 안에 증대세로 돌아설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어느 시점에 금융위기가 극복된다 할지라도, 향후 미국의 민간 소비가 과거와 같이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미국경제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소비경제를 기대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미국을 대체할 안정적인 대안 수출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동아시아의 대미수출 부진현상은 오래전부터 목격돼온 일이다. 동아시아의 최대시장은 이미 미국이 아니라 바로 역내 시장 동아시아이다. 과거 역외시장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동아시아 내외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을 비롯한 상당수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통화의 저평가 정책에 기반을 둔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서 서서히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제는 동아시아 각국의 내수 확대를 위한 역내 협력, 즉 충분한 역내 시장 창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경주될 시점이다.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 소비경제를 동아시아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으나 아직 일부밖에 개발되지 않은 동아시아의 민간 소비시장을 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별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의 격차 해소 및 내수 확대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복지 증대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예컨대, 중국이 내부 격차 문제의 해소를 위해 성장만이 아니라 복지와 분배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낙후 지역의 구매력이 증가함으로써 중국의 소비재시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역내 국가들 모두가 이 같이 한다면, 동아시아의 (실질 및 잠재적) 경제력과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동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발전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금 동아시아에게 필요한 것이야말로 지역 복지공동체의 구축이다. 서로의 복지체계 강화가 동아시아 소비경제의 증대라는 지역공공재 창출로 이어진다는 공동 인식하에 역내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통합형 세계화의 전제 조건 중의 하나인 동아시아의 사회통합형 지역경제 통합을 이뤄내는 길임은 물론이다.

지난 10여 년간의 동아시아 통상협력은 주로 ASEAN+3 국가들 사이에서의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 혹은 진행돼왔다. 앞으로도 이 점에선 큰 변화가 없을 듯하다. 동아시아의 사회통합형 경제통합은 결국 (적어도 당분간은) FTA를 정책 수단으로 삼아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통합형 FTA’ 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그 구체적 제도 디자인과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이유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FTA가 반드시 ‘높은 수준의 포괄적 범위’ 의 것일 필요는 없다.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이 아닌 복지동반형 혹은 사회통합형 경제통합을 지향한다면 정책 수단으로서 는 오히려 ‘낮은 수준의 제한적 범위’ 의 FTA가 적격이다. 물론 그 수준의 낮음과 범위의 제한 정도는 상대에 맞추어 정해갈 일이다. 중요한 것은 체결국들 모두의 사회통합이 유지 혹은 강화되는 것을 핵심 목표의 하나로 삼아 FTA의 내용과 성격을 창안해내는 일이다. 그 내용에는 사회복지 협력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필요할 경우 FTA의 수준과 범위는 사회통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시간을 두고 점차 높이고 넓혀 가면 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FTA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첫째,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계경제질서의 지역주의적 개편 흐름에 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역제주의 시대의 도래를 준비해야 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통상 및 투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일본이나 중국, ASEAN 등 역내 주체들이 어떤 FTA기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일정 부분의 정책기조 부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제한적 FTA로서 한일FTA 협상의 재개, 한중FTA 조기 협상 개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적 지역FTA망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ASEAN+1s’ 체제를 기반으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일, 한-중 FTA를 연결하여 EAFTA를 완성해내는 것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통합형 FTA 추진이다. 그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다. 낮은 수준의 제한적 FTA 혹은 ‘맞춤형 FTA’ 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필요 시, FTA의 수준과 범위는 체결국 모두의 수용 및 적응 능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대해 나가면 된다. 사회통합형 FTA 추진 과정 가운데 국내 차원에서는 한국의 보상과 복지체계, 사회안전망 구축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FTA의 상대국, 내용, 수준과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FTA정책 수립·체결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통상절차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역내국 전체차원에서는 상대국의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을 내용의 FTA체결을 위한 복지동반형 FTA가 바람직하며, 더욱 획기적으로는 사회통합형 경제통합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나 대안적 FTA를 창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양대 목표(동아시아중심 FTA 및 사회통합형 FTA)와 더불어 현재 한국이 맺거나 협상 중에 있는 역외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한·미FTA와 한·EU FTA를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한·미FTA의 경우 오바마 정부의 재협상 논의에 희망을 걸었던 저로서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좀 답답한 면이 있다. 한·미FTA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안보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영역에서도 FTA를 통해 hub-and-spoke 관계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 경우 spoke들 즉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지역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양자간 FTA 전략은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분열책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미 FTA의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사회통합형이 아닌, 신자유주의적 FTA라는 것이다. 이것은 잘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독소조항의 제거 필요성은 물론 FTA의 수준이나 범위도 재조정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감안할 때, 설령 미국이 안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오히려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6월의 국회 본회의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문제가 넘어갈 때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한·EU FTA의 경우는 공부가 안되어 있어서 앞의 두 가지 정책전략목표에 비추어 몇 가지 질문을 적어보았다.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역제주의 지역협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으므로 동시에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한·EU FTA의 내용 문제인데, 그것이 사회통합형에 가까운지 아니면 최소한 한·미 FTA보다 좀 나은지 혹은 별 차이가 없는 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독소조항 문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한·EU FTA의 수준 및 범위를 우리가 수용 가능한 정도로 낮춘다면, 우리 자본주의가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최 교수님이 워낙 거대한 상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정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정태인 선생님께서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부분은 뺐으면 좋겠는지 한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정태인):** 사실 사회통합형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화를 통한 세계화라는 것은 80년대 후반에 이미 논의되었던 것이고, 동북아위원회에서도 이야기 되었었다. 그런데, 지금 수단을 지역주의로 설정하셨는데, 목적과 수단이 잘 어울리는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집단행동의 문제라는 것은 공공재 비슷하게 비용이 들지만 행위의 결과가 모두에게 돌아간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자주의의 문제는 자유무역이지만 현존 세력을 인정하는 상황 안에서의 자유무역이고, 강대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약소국들은 다자주의를 선호하고 다자주의 안에서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기 원하지 FTA형식은 원하지 않는다. 약소국들이 FTA를 맺는다면, 그것은 양 국가 지배계급 간 타협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최태욱 교수의 상상에서 목적인 지역복지공동체가 공공재가 되고, 집단행동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의 다자주의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약소국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목적과 수단을 연결하려다 보니 논리가 뒤집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충분히 복지를 마련할 수 있다면 지역주의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복지공동체라는 목표와 현존하는 문제점이 섞여있다. 지금 지역주의 흐름은 맞는데, 강대국이 다자주의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을 많은 국가들이 반대하니까 양자 간 협정을 맺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WTO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발의가 된 ISD의 경우, EU도 반대를 하니까 미국이 작은 나라들과 WTO 이외에 양자협정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지역주의복지공동체와 다자주의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목표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복지공동체가 있었던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위기 대응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1,2차 세계대전이 모두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마셜플랜 실행된 것을 복지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사회주의 존재라든가, 유럽 각국의 좌파의 존재에 대한 위기 대응책으로 마련 된 것이지, 케인즈주의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시아에서 갑자기 금융협력이 강해진 것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일 강대국들이 동아시아지역주의를 이야기해도 중국, 일본, 한국이 많은 돈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개별적인 FTA의 방식이 아니라 다자주의의 형식으로 가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오히려 동북아위원회에서의 구상은 한꺼번에 가는 것이 좋고, 동아시아 철도나 동아시아 환경협력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제를 먼저 내놓자는 것이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복지공동체로 가는 것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이러한 상황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한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FTA를 통해서 복지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지금의 글로벌 위기를 생각해보면 아시아공동체로의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중국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엔화를 아시아 화폐로 만들려는 노력 등은 아시아에서 공동체 형성의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과연 최태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공동체를 선택 할 것인가를 보았을 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중국은 시민사회가 없는 ‘패권국가’이다. 중국을 인정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복지나 공동체 형성에 대한 요구를 하는 직접적 요소를 넣어가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FTA에 관해서는 이야기 해보자면, 동북아위원회에서 FTA는 전혀 생각조차 안하고 있었고, FTAR로드맵이 나왔을 때 역내 FTA가 먼저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기는 했었지만, 진행이 되지 않았다.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FTA는 역시 협력의제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이 맞고, 사회통합형 FTA는 찬성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이상론에 가깝고, 현 정부에서 할 가능성은 0%이다.

저는 한-EU FTA는 걱정안합니다. 우리나라 통상관료들이 한-EU FTA를 한-미 FTA보다 절대 먼저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한-EU FTA 초안은 가지고 있는데(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독소조항은 들어있다. 우리 관료들이 탁월한, 협상용으로 래칫조항(역진금지)이 들어갔고, 또 지적재산권 분

야를 미국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미FTA에서 미국이 원래 가장 초점을 뒀던 것이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인데, 이것을 우리 관료들이 원래 EU형 FTA에는 없는 수준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EU입장에서는 황재한 것이죠. 보다 면밀하게 어느 수준인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서는 화학·기계가 문제 될 것이고, 농업역시 문제가 될 것이다.

한·EU FTA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EU FTA보다는 한·미 FTA가 더 문제이다. 한·미FTA의 마지막은 쇠고기 완전개방, 자동차는 10%를 보장하라는 요구 정도가 관철되면 아마 미국에서 비준이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정부가 국민 모르게 넘기는 것을 국민한테 어떻게 알리느냐가 남아있는 문제이다.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하는 것은 원래 안 되는 일이었고, 한나라당 의제를 민주당이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말은 사실 캐나다 좌파에서도 논쟁이 되었던 것인데요. 야당이 재협상을 하는 것이 옳느냐에 대해 논쟁이 되었을 때, 재협상을 하면 더 나빠지니까 폐기가 옳다고 결론이 났는데, 폐기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은 참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자(윤성욱):** 한·EU FTA에 들어있는 래킷조항은 어떤 건가요?

**정:** 개방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유보에 관해서 스크린쿼터를 75일 했잖아요? 래킷이 적용이 안 되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50일로 줄였다가 다시 75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래킷이 적용되면 우리 스스로 50일로 줄이면 이제 50일이 한계가 되요. 이 애긴 현재 유보에 들어있는 모든 서비스시장은 개방만 되고, 거꾸로 돌아갈 순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개방된다는 겁니다.

**최:** 개방하는 방식은 네거티브 리스트입니까?

**윤:** 서비스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 EU는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인데.

**정:** 포지티브로 하면, 개방할 것을 규정하고 개방 안할 것은 규정 안하는 것이지요?

**최:** 개방할 것만 쓰는 거지요.

**정:** 그럼 유보리스트가 없는데, 어떻게 래킷이 들어가나?

**최:** 그렇죠. 래킷이 왜 들어가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정:** 래킷이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한겨레가 확인했다고 하는데, 읽어보면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 쪽에서 네거티브를 했을 것 같아요. 미국형을 그대로 들고 갔다고 하니까. 관세는 우리가 덜 낮추는 것이 이익인데, 서비스·지적재산권·투자는 푸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형,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의 목표는 구조조정이예요. 높은 수준에서 우리나라 산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지적재산권·투자는 우리나라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다 개방 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항을 관료들은 국내의 저항집단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개방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거죠. 그래서 한·미FTA에 대해서 스스로 높은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목표는 서비스·지적재산권·투자였기 때문에 결국 두 이익이 합치 되었어요. 우리 국민의 이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하는 것이 최태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FTA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 협상을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서비스 부분은 우리보다 선진서비스 국가인

미국이나 EU에서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 수준으로 만들자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자발적 개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 적용이 되게 되죠.

**토론자(주장환):** 최 선생님 글에 대해서 질문 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성격·수준·방식의 FTA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것인가의 문제가 글 전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하고 만들어 내야한다고 말씀하셨지만, FTA가 워낙 현안사안이다 보니 지금 제기된 이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FTA에 대해서 선생님은 지역주의 형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효한 방식(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ASEAN도 FTA가 제조업분야와 서비스 분야(체결 완료, 발효 전)에 이미 맺어져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동아시아지역 내에서 한-중-일간 FTA가 맺어지지 않은 점을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SEAN과 맺은 FTA가 아직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효과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FTA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보다 오히려 말씀하시는 문제는 FTA의 성격, 지금 말씀하신 사회통합형 FTA가 되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세계정치경제질서에서의 신자유주의적이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국제질서는 오지않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태인 선생님이 아까 농담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FTA는 결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진영이나 극복하려는 진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가능성을 전제를 하고, 그 가능성에 따라서 한국 국가 이익이 무엇이고, 국제정치경제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국)는 어떤 포지션과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더 많은 고민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 선생님 말씀에 대해, 최 선생님께서 조금 더 디펜스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지역주의라는 흐름, 특히, FTA라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좋은 목적을 담아보자는 것이 최 선생님 기본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주 박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FTA(Free Trade) 자체가 복지를 내장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자유무역이 복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최:** 제가 상상하고 있는 세계화의 방식이라든가 사회통합형 FTA라는 것이 현실과의 괴리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저는 다만 발상의 전환과 그에 합당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길이 멀지요.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FTA의 성격 변화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일본은 FTA보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말 그대로라면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의미죠. 중국의 경우도 ASEAN과의 FTA를 통해 상당한 양보를 해가며 자국의 이익 증대만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럽의 경제통합에서도 사회 조항 등에 합의함으로써 사회통합적 성격을 상당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FTA 표준으로, 일본의 EPA에서 더 나아가 SEPA(Socio-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등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기본적인 틀은 이렇죠. 자유무역론은 그 안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뒤쳐지는 집단을 조정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잔여적인 측면으로 복지 이야기를 하지요.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점, 복지를 잔여적으로 보지 말자는 고민들도 납득이 가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또 고민이 되거든요. 조금 더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비즈니스 섹터니까 경제통합의 수요라는 것이 복지를 증대하기 위해 분출되는 게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해서만 가다보면 거기에선 당연히 정치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요. 그러한 문제들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적어도 사회통합의 위기상황으로까지는 가지 말게 하자는 것이 소극적 의미가 사회통합형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사회통합형을 추진하고 생각하는 단위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자본간 경쟁에서 자본 전체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에 총 자본으로써 국가가 있을 때, 그 생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국내에서의 복지란 말이죠.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켜서 보았을 때,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그런 협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상황이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고를 해보고,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협력의 단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작동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이죠.

**최:** 그건 결국 동아시아 역내의 국제협력 문제겠지요. 국제협력이 물론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지역단위의 국제협력은 글로벌 차원의 협력보다는 용이하지요. 유럽국가들 간의 협력이 높은 수준의 지역협력체인 EU를 발전시켜온 걸 봐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어떤 형태이든 지역주의는 발전해갈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 내용이 별로 없지만.

**이:**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잖아요.

**주:** 저는 세계질서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정태인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미국 발 금융위기라는 것이 실제로는 양극체제로 있다가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국제정치경제질서가 존재하고 있다가 이번을 계기로 흔들리면서 향후 국제정치경제질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다극으로 갈 것이라는 견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G2시대, 양극체제로 갈 것이다. 양극이라는 것은 미-소가 아니라 미-중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고, 그 것을 일단 중국이 그만한 소프트파워를 가졌느냐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떠나서, 추슬러 보면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국제정치경제 질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가 FTA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란 국가의 장기국가전략 차원으로 바라본다면,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약소국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닌, 중간정도의 규모, 그것을 middle power라고 하든 중간국가라고 하든 그런 단위의 국가이고, 그 속에서 그 국가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지, 평화, 민주, 통일 등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고, 그런 이익들을 담보해낼 수 있는 국가로, 그런 방식의 국력을 가진 국가로 한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 예측 가능한 두 개의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이러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을 조금 더 발전시켜보면, 우리 국가가 평화, 복지, 통일, 민주와 같은 가치를 실현시키고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극으로 어느 한 극의 중심국가로 서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미-중

양극체제의 한 세력에 지금보다 조금 나은 위상을 가지고 편입되든지, 아까 말씀하신 hub-and-spoke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허브가 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허브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따져보았을 때 매우 낮으므로, 변화될 세계무대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FTA 전략 등을 판단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 정:** 복지보다는 현실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건지요.

**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다른 공부모임에서 E.H. Carr의 20년의 위기라는 책을 보니까 이미 향후 국제질서에 대해서 여전히 강대국 중심으로 민족국가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겠지만, 오히려 학자나 사람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들은 국가의 문제 혹은 권력관계 등이 아니라 국민·혹은 세계인들의 복지나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국제기구, 중간규모의 국제기구 설립 등을 주장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민족국가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문제는 국가 간의 세력관계들을 무시하고 논의를 진행하면 계속 괴리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정태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 카아의 논리는 원래 미국의 단일패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였어요. 이미 그 단일 패권 속에서 중국이 굉장한 이익을 누리고 있고, 차이메리카(Chimerica)라고 하는 전 세계의 2/3에 해당하는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됐죠. 근데 그것이 무너진거죠. 미국 금융위기에서 달러 패권, 달러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무너졌고, 그렇다면 그 이후의 방향으로 G2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살려야 되고, 다시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중국 입장은 유로와 달러, 그리고 위엔화라고 하는 세 개의 복합 바스켓 통화 체제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냥 있어도 달러 체제가 계속 약화될 것이고, 복수의 기축통화체제로 가게 될 텐데, 두 개 이상의 기축통화는 굉장한 혼란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화’가 필요하고, 따라서 복합 바스켓 체제의 제도화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극체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위엔이 아니라 아쿠(ACU), 아시아통화가 되어야 좋다. 헤게모니 통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동성이 공급·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른바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케인즈는 채권국과 채무국,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동시에 책임을 지는 국제청산동맹(현재의 EU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만들자는 것이다. 삼국 간에 그런 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케인즈구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국의 패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을 때 세계 정치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영국이 패권에서 후퇴하느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금 오바마정부는 어떻게 보면 케인즈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을 크게 압도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굉장히 어중간한 입장이고, 미국정부는 속으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고 싶은 충동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국의 현 상황은 과거 위기상황을 수습하면서 세계 단일 패권국가로 올라가게 한 루즈벨트 때보다 훨씬 어렵다할 수 있고, 오바마는 위기를 수습하면서 미국이 다극 중의 하나의 국가로 가도

록 관리해야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정치가 아마 못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는 관계가 되고, 결국 미국의 이익도 삼극 체제로 가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삼극이 견제하는 속에서 사실 경제적으로 남을 도와줄 여력도 없고, 그러면서 군사력도 있고, 그러나 또 시민사회도 없는 패권국가라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국이 제2의 패권국가로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나 내지는 FTA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 한국의 국익이라는 것은 커가는 중국을 견제할 세력을 빨리 형성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아세안·일본·러시아 등과 외교적으로 협력하면서 어차피 중국 쪽으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서 역내에서 균형을 이루고, 외교 전체 의미가 상급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제일 맞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FTA를 한다면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 중국이 다 장악하게 될 것이다. 우리입장에서는 FTA가 아닌 방식, 오히려 다자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이 아닌, 이미 맺어져있는 한·아세안 FTA라는 것의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사회통합의 부문과도 맞지 않고, 주요 경제권과의 FTA는 자제하면서 중소 경제권과의 FTA를 맺어가는게 좋은 건가요.

**정:** FTA를 맺는 것보다는 ADB 개혁 등을 통해서 가령 몽골이나 북한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던지 이런 쪽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 FTA는 미국의 돌파구였지 경제발전이나 협력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정리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FTA얘기가 나오면서 상황이 변했고, 그 땐 위험성을 잘 몰랐었다. 물론, FTA의 내포를 넓혀나가면서 공정무역협정(Fair Trade Agreement)으로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현실에서는 이미 협력의제가 그렇게 설정되어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FTA가 선호되는 이유는 쌍무적으로 간결하게 쟁점을 정리하고 목표를 하나로 설정해서 양자 간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수단인 것 같다.

**정:** 현실 FTA의 장점, 이유를 가지고 복지공동체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그런데 각 국가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흘러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 세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한·미 FTA가 타결이 되고, 한·EU FTA가 타결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최:** 아무래도 한미FTA는 체결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 간에 협정이기 때문에 물러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현재는 뒤엎을 수 있는 세력도 없다.

**정:** 미국이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미국도 FTA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정:** 원래는 FTA의 전략을 다시 짜서 NAFTA부터 다시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위기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재협상 안하겠다고 나왔던데.

정: 재협상을 안 하면, 다른 부분을 조정 하겠다고 하는 얘기다.

이: 객관적으로는 재협상 가능성은 별로 없어진 것 같다.

정: 그런데 자동차 10%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 군용차 등으로 해서.

이: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정: 그럼 더 요구하게 될 것 같다.

주: 조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계의 이러한 변환흐름에서 중심이 될 수 없고, 보편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가치 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가지려고 한다면, 나중에 G2 혹은 G3 변화된 세계질서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박노자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얘기하셨는데, 마찰없는 합의에 의한 형태로써 모든 세력에서 중립을 선언해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전략적 패배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EU 등과의 FTA에서 성급하게 모든 것을 먼저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재결합 내지는 결합에 가까운 형태로 전략적 포지션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 FTA가 타결되었을 경우에 저는 실무적으로나 독소조항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다. 그런데 FTA가 사회통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물론 제 개인적인 상상 혹은 추측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 선생님께서는 FTA를 중심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 더 나쁘게 보시는 것 같다.

정: 2,3개국 협정을 맺는 현재 형식의 FTA가 얼마나 더 같지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위기 속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

최: 한·미 FTA와 한·EU FTA가 다 된다면, 정말 할 말이 없다.

정: 지금 정권이 앞으로 3년 반 동안 FTA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된다.

주: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부분은, 세계화의 흐름상 어떤 형식으로든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한·미 FTA와 한·EU FTA는 추진하고 있지만,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쪽에서도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 같다.

정: 기본적으로 외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국과의 FTA가 바람직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고 싶으면 하자고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FTA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에게 남은 건 그 카드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주: 저는 지역주의에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이 경제통합의 방식, FTA라는 방식으로 먼저 돌파구를 열어줘야 하는 것인지 아직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최: 만약에 한·미 FTA가 발효가 된다고 할지라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확산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를 여기서 멈추는 건 좋지 않다고 본다.

이: 한·중 FTA가 타결되면, 한·일 FTA도 타결될 것이다.

정: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것인데, FTA를 세계 3대강국하고 다 하고, 거기다 일본까지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은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제조업까지도.

**최:** FTA를 하긴 해야 할 텐데 결국 FTA의 수준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 저는 사실상 사회통합형 FTA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국가라는 행위체가 약한 국가들과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려고 할 것이고, 높은 국가와는 어떻게는 낮은 수준으로 체결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이:** 그러니까 보통 수준이라면 해볼 만한데, 이제는 그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바뀌었다.

**정:** 우리도 구조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번 뒤집어 놓으면 금방 시장 자정능력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산업만 알아서 잘 정리될 것이라는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다.

**주:** 저는 지역주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수단이 꼭 FTA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최:**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아까 정태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 내 공공재 창출을 위한, 예를 들어 아시아 13개국이라면 철도건설이나 안보이슈를 활용해서 협력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정:** 6자회담이 잘 되면, 물론 미국이 빠지면 좋겠지만 안 빠져도 기존의 틀에 ASEAN을 더한다면, 경제공동체 형성과 나아가 군사평화 공동체로 제도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아시아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 시민사회 쪽에서는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국내적으로 사회복지 강화책을 세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 한·미, 한·EU FTA 이후에도 동아시아 FTA는 계속 추진해서 그 후의 어떤 변화에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동아시아지역주의는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요즘은 남미국가연합을 공부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남미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남미 지역통합을 강화시켜가고, 나름대로 복지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

**이:** 그런데, 남미의 상황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다. 남미는 역내 국가들이 다 비슷한 규모이지만, 아시아 그리고 우리의 경우 중국의 존재자체가 워낙에 커서 FTA나 경제통합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역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FTA전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외교적인 효과 즉, 패권확보 중국 쪽 표현으로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다. 중국은 일단 주변국부터 시작해서(인민폐 국제화 전략도 이런 것이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다 뺏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과의 FTA전략에서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중국은 높은 수준의 FTA를 안하려고 한다. 사전 포섭의 의미로 한국과 중국 모두 리스크가 적은, 아주 낮은 단계라도 일단 뺏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 같다. 만일 중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최:** 한·미 FTA 한·EU FTA이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좋은 것이다. 동아시아 FTA의 기본은 낮은 수준의 FTA로 만들어내면 괜찮을 것 같다.

**정:** 한-일 FTA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국이 자꾸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한다.

**주:** 제 생각에는, 아주 미흡하겠지만 정권에 대한 대응의 방향도 모든 FTA에 대해서 공격·대응 하는 것 보다 낮은 수준의 FTA를 하자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한-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 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한-중 FTA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지켜보자고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낮은 수준에서 FTA를 맺자고 먼저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한-미 FTA를 추진한 근본 배경에 중국의 성장을 위협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주:** 왜 그렇게 중국을 과대평가 하는지 모르겠다.

**정:** 중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게 우려할 만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견제하느냐의 문제에서, 미국을 데려와서 막는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한다는 거죠.

**주:** 이런 논의들이 정권이 아니라 소위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별 세팅을 하고 신중한 고민을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공감한다. 사회통합형 FTA가 필요하다는 것도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남은 것은 중국과의 FTA 문제인데, 정부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은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중국과는 하지 말자는 얘기, 또 하나는 중국하고 할 것이라면 높은 수준에서 해버리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역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 두 개를 합치면 세계 요구해서 결렬시켜버리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주:** 선생님이 생각 하실 때, 조건을 바꿔서 폐기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정:** 가능하다. 협정문 상으로는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6개월 뒤에 자동 폐기 된다.

**최:** 멕시코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NAFTA를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주:** 그럼 모든 FTA를 다 폐기 시키는 것이냐, 아님 한-미, 한-EU FTA만 폐기 시키는 것이냐?

**정:**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다면 굳이 폐기하지 않고, 보다 더 많은 나라와 통합시키는 수준으로 낮춰 갈 수도 있다. 원래 ADB의 목적은 역내 기금을 모아서 마셜플랜과 같이 투자하자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전체수준은 낮추고, 복지수준은 높이는 방향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이:** 그럼 6자 회담을 이용해서 사회통합형 지역주의의 형태로 가게 하면 어떨지.

**정:** 그건 6자 회담이 성공해서 북한문제가 해결이 되면 6자 회담의 틀은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고, 집단안보체제로 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복지와 경제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이:** 한-미, 한-EU FTA가 이미 굳어진 상태이니까 FTA보다는 6자 회담의 방식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여기에 사회통합형 공동체를 엮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 6자 회담은 미국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이 있는 경제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의제별로 보자는 것이다.

**정:** 회의 자체는 ASEAN 플러스도 있고, 문제는 중국하고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 발효된 FTA의 수준을 낮춰가는 나라는 없나? 항목 별로 재협상해서 빼는 방법도 좋을텐데.

**이:** 한-미 FTA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다.

**최:** 미국은 원할 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한-미 FTA가 발표된 후에도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강화되면 재협상이나 수준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주:** 완전히 사회통합적이지는 않아도, 어쨌든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활성화 되면 유리하다는 판단이 든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한 국내적으로 복지의 가치와 재분배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다.

**정:** 지역주의가 국내의 복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인가.

**이:** 얘기해보다 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정권을 잡은 사람에 따라 국가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EEC의 경우 구성원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서는 내부협상을 하고 결과는 모두를 구속한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그것보다 국가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하지는 말고, 6자회담 식으로 조금 느슨하게 국가 간에 협력체를 만들어 놓고, 지역은 또 지역끼리 작게 연합-동맹들을 만들어서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키워주고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더 만들어가고 하면서, 결국 시민사회가 핸들링할 수 있는 역제 간 수단들을 다양하게 배치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 가지로 전체를 묶고 그러다가 만약에 국가의 성격이 변하고 시민사회의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냐는 문제가 있다.

**최:**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데, 그것이 지역통합의 중심축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면 두만강 유역 개발협력사업이 있었는데 십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다. 이러한 하부지역 협력 혹은 지방간 협력, 즉 국가가 빠진 초국적 협력의 시도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었던 초국적 사업들은 말만 무성했지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다.

**정:** EU통합 당시에 역내에 EU의 이념과 안 맞는 협정 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또 기존에 있던 협력관계들을 다 인정하고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EU의 지향과 안 맞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동아시아 지역이 약화되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협정들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EU가 형성되었을 때, 기존에 있는 타국과의 협정이나 역내의 국가들 간 조약 협정 등이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살펴봐야한다는 얘기다.

**윤:** EU는 신입 회원국으로 들어갈 때는 EU가 기준으로 정한 것을 100%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면 회원국 심사 절차에 못 들어간다.

**주:** 몇십년 동안의 EU 성립과정에서 아젠다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 EU의 대외관계 관리 사례가 어느 정도 밝혀지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게 큰 문제이다.

**주:** 저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서 한 가지만 여쭙보면, 만일 선생님의 제안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아젠다를 통해서 중국이 패권국가 야욕을 가지고 있는냐고 물어보는 방식보다, 중국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주면서 대의명분이나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롭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설득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정치경제질서나 국가 본성도 다면적이고 정리되지 않는 것이니까.

**윤:** 저는 그런 측면 때문에 EU통합과정을 보면서 아시아지역주의를 연구하는 것은 오류라고 본다. 중국이라는 존재, 미국과 일본, 또 한-미 관계가 있고 아시아에서 지역주의라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힘들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 지역주의를 토대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낮은 수준의 제한적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 정리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중국이나 일본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한·ASEAN, 일·ASEAN 등과는 어떻게 조율시켜 나가면서 할런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주의를 통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다.

**정:** EU가 형성되는데 소련과 미국이 내버려뒀던 건 분명 아니다.

**윤:** 미국을 무시하고 중국과 하기도 어렵고 이런 국가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주:** 한국은 역사적으로 연루와 편승을 잘못해왔고,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FTA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정:** 한·미 FTA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확 좁혀버렸다. 사실 미국은 미·일군사동맹의 강화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한 발 앞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논리로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다.

**주:**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팩스 아메리카가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정:** 팩스 아메리카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관료들 보고만 받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윤:** 아까 선생님께서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절대 먼저 발효될 일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된다. 만약에 한·EU FTA나 한·미 FTA가 좋아서든 어쩔 수 없든지 간에 돼야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두 개 가지고 미국과 EU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한·EU FTA이다. 사실 우리가 한·미FTA를 하면 중국과 일본도 따라 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이 반응을 하긴 했었지만, 우리가 협정을 맺지 않고 카드로 가지고 있는게 아니니까.

**주:** 제 생각으로 중국은 한국의 현 정권에 대해서 점점 더 세계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그런 전략적 조치들은 긍정적인 판단 하에 움직이는 것 아니냐.

**정:**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일본에 앞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다.

**이:** 발제문으로 돌아와서, 반세계화 운동을 중요한 변수로 보셨는데, 그것보다는 시스템의 위기로 변수를 두시는 건 고려 안 해보셨는지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실제로 반세계화 운동, 세계화에 대한 저항들이 당국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변수로 인식이 되었는지요. 1999년 시애틀 투쟁은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그랬던 거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요.

**최:** 다자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력화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자주의 방식의 세계화 추진은 그 노출정도가 심해 반대가 거셀 수밖에 없었다.

**정:** 지역주의를 찬성하고 다자주의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세계화 일반을 포괄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이다.

**이:** 다자주의와 같은 경우 합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고 강대국의 이익이 관철되기 조금 더 불편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지, 반세계화 운동이 타격을 입혀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최:** 맞다. 반세계화 운동은 다자주의뿐 만이 아니라 지역주의 경로를 포함한 경제통합, 즉 세계화 전체를 반대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이유가 사회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통합의 폐해 때문임을 직시해야한다. 따라서 그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세계화가 중요한 것이며, 그런 방식의 세계화 일수록 반대도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역주의 방식이 피해 대책 마련이나 사회통합형 경제통합 추진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앞서 말한 대로이다.

**주:** 그건 다자주의의 문제일 뿐 아니라, 모든 세계화적 움직임에서 사회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통합이라든지 심지어는 지역주의에서조차도 그런 부분이 일정한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정:** 세계화라는 것은 구조조정을 초래하는데, 강약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구조조정의 피해자 내지는 그것에 동조하는 지식인일 것이다.

**주:** 예를 들면 약자의 반항이나 분노가 조직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주:** 중국은 패권국가로의 도약의 한 과정으로써 FTA를 매개로 동아시아 지역 블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고, 이번에 아시아통화기금 내는 것을 봐서도 일본과 경쟁하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면 패권국가화나 보통국가화 같은 위험한 움직임이 바로 우리 인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러시아나 이쪽에서 견제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해주실 수 없는지요.

**정:** 러시아-한국-아세안으로 이어지는 종적 연결을 먼저 강화하자라는 말이었고, 사실 한-중-일이 무엇을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종적연결이 먼저 되지 않으면 한국이 중국-일본을 끌고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종적인 나라들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는데서 오는 이익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주:** 제 얘기는 러시아와 아세안에 그만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정:** 어느 한쪽에 달라붙는 전략을 쓰면 안 되겠지만, 중국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 된다면 미국이 자기 쪽에 붙길 바랬으면 바랬지, 그것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도 지금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위기가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태도가 바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발제문 8쪽에 안전망 설치, 복지 증대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증산증화 하고, 소비를 확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다. 더군다나 중국에 그렇게 하라고 하며, 안할 것 같다.

**주:**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위기 대응 방식 속에 여러 가지 경제부양책도 있지만, 의료보험이라든지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위기가 터지니까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의 성장이 결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안되고, 사회의 불만정도와 위험성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제 사회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해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의 정책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 중국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은 팬텀을 것이라는 것은 위기 오고 금융혼란이 오더라도 전두환 식으로 처리할 것이다. 투자할 곳도 많고.

**최:** 이러한 이상적 구상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 많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나 현실의 구조 하에서만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 필요하면 구조 자체를 바꾸기도 했다. 동아시아의

사회통합형 경제통합도 그런 맥락에서 목표로 삼아 추진해볼 만한 것이라고 본다. 중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구성원들이 서로 설득하여 이러한 상상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다면 그 구체적 방안을 찾는 것이 문제이지 될지 안 될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수단을 찾았으면 좋겠다. 현실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현실에 맞춰 살자고 할 수는 없다. 지향성을 염두에 두고 쓴 사람에게 그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거냐고 물으면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정:** 논리적으로 사회통합형을 위한 재원확보가 되고, 몇 개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그건 FTA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자간 형식으로 추진해야지 훨씬 합리적이다. 사회통합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원 확보에 합의한다는 거잖아요.

**최:** FTA는 그러한 사회통합형 경제통합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정:** 사회통합형 양자간 FTA를 먼저 한다는 논리인건가

**주:** 그걸 통한 지역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정:** 그렇다면 이건 위기극복책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유일하지, 장기적으로 보고 진행한다는 것은 정치적 반대가 너무나 클 것이다.

**최:**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를 왜 역내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도화의 발전이 없어도 기능적으로 통합이 진행된다면 괜찮다는 건가.

**정:** 관세나 이것 때문에 역내에서 무역이 저해된다고 이런 상황은 없다.

**주:** 제가 아는 한 선생님께서는 가만히 놔둬도 한·중 간 경제통합 정도는 2~3년 지나면 FTA 안 해도 그 통합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FTA를 하려면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하고, 그게 아니면 한·중 간 경제통합은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얘기 했다.

**정:** 사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이 정치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장기 비전에 대한 합의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 점들이 안타깝다.

**주:**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바뀌는 것, 없애는 것, 이런 점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최:**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하는데 지금은 승자독식으로 가니까요.

**이:** 더 다룰 말씀이 추가적으로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NSI**